

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-29호

「대전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조례」가 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3월 15일

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대전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조례안 예고

1. 제정이유

현재 노인교육은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, 노인들의 재사회화에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습득하려는 교육 수요가 점차 증대되고 있어 노인교육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- 나.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(안 제4조).
- 다. 노인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5조).
- 라.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6조).
- 마.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(안 제8조).

3. 의견제출

가.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(참조 :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실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·주소·전화번호(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)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35242 /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

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실)

(전화 042-270-5127, FAX 042-270-5039, E-mail : pooh7298@korea.kr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
4. 제정 조례안 : 붙임

대전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교육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노인교육”이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대전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노인교육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노인교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노인교육의 목표 및 추진방향
2.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
3. 노인교육 지원사업
4. 노인교육 재원조달 계획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교육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사업) 시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·운영
2. 노인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파견
3. 노인교육 실시 및 정보제공
4. 그 밖에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6조(재정지원)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홍보) 시장은 노인교육에 대하여 대전광역시·관련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 관련 단체 및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노인복지법

[시행 2016.12.30.] [법률 제13646호, 2015.12.29., 일부개정]

제2조(기본이념)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.

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.

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6조(노인여가복지시설)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.

1. 노인복지관 : 노인의 교양·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,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·재가복지,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2. 경로당 :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·취미활동·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3. 노인교실 :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·노인건강유지·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4. 삭제

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

령으로 정한다.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[시행 2014.3.18.] [법률 제12449호, 2014.3.18., 일부개정]

제15조(평생교육과 정보화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, 이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·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,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